

2020 육아정책 심포지엄

“미래를 향한 포용적 육아정책 방향”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 문재인정부 3주년 육아정책 성과와 과제

2020. **11. 26.**(목) 10:00~12:00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미래를 향한 포용적 육아정책 방향

- 문재인정부 3주년 육아정책 성과와 과제

| 일 시 | 2020. 11. 26(목), 10:00~12:00

| 장 소 |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일 정 표 |

사회: 김은영 실장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육아정책실)

시간	세부일정
10:00	개회
10:00~10:10	인사말 백선희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주제 발표	
10:10~10:35	발표 1 문재인 정부 육아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근진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10:35~11:00	발표 2 민선7기 경기도보육정책 중점추진방향 및 시사점 백선택 연구위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지정 토론	
11:00~11:30	토론 이재희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11:30~11:5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1:50~12:00	폐회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오늘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육아정책 심포지엄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육아정책을 선도하기 위하여 매년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육아지원을 위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래를 향한 포용적 육아정책 방향」이라는 대주제 하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과 유아교육 및 아동돌봄 정책 방향,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육아정책 등의 세부 주제에 대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오늘은 ‘유아교육 정책과 보육 정책의 방향’, ‘아동 돌봄 정책’과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한 지난 두 번의 논의에 이어 ‘문재인정부 3주년 육아정책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하여, 부모의 노동권과 육아권을 비롯하여 아동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정책들은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간 정부의 육아정책은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과 양육지원체계의 개편, 돌봄체계 구축 등 큰 틀에서 제도적 구축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꾀하여 왔으며, 정책 실행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래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육아정책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전략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출산 및 양육이 용이한 사회환경 조성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촘촘한 육아지원과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지원, 그리고 포용국가를 위한 포용적 육아 정책의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양육과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을 진단해보고 향후 과제들을 모색하여 모든 아동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성평등한 양육과 노동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 오늘 발표를 위해 참석해 주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백선정 박사님과 연구소 김근진 박사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연구소 도남희 박사님, 이재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신 연구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 11월 26일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선희

Contents

| 2020년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 주제발표 1 | 문재인 정부 육아정책의 성과와 과제 ————— 1

김 근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주제발표 2 | 민선7기 경기도보육정책 중점추진방향 및 시사점 ————— 25

백 선 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토론 | ————— 39

이 재 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41

도 남 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44

| 주제발표 1 |

문재인 정부 육아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 근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발표문

문재인 정부 육아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근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개요

육아정책의 범주

- 본 발표문에서 육아정책의 범주는 저출산 정책,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 아동정책의 범주로 구분함
- 저출산 정책은 현금지원, 시간지원, 임신 및 출산지원 정책에 한정함
- * 본 발표문의 내용은 현재 진행중인 2020년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I): 2019~2020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김근진·박창현·김희수)에 기반하고 있음

개요

2020년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부모 설문조사	- 총 1,731명의 부모 참여 -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563(32.5%), 유아부모 784(45.3%), 초등저학년부모 384(22.2%) - 모 65%, 부 35%
전문가 의견조사	- 총 100명의 전문가 참여 - 전공(%): 유아교육/교육 39, 보육/가족/아동 43, 사회복지/행정/경제/기타 18 - 분야: 유아교육 35, 보육 40, 기타 25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 총 215명 참여: 원장 52(24.2%), 교사 163(75.8%) - 공립단설 69(32.1%), 공립병설 44(20.5%), 사립사인 81(37.7%) - 사립법인 21(9.8%)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 총 151명 참여: 원장 55(36.4%), 교사 96(63.6%) - 국공립 34(22.5%), 사회복지법인 7(4.6%), 법인단체 8(5.3%), 민간 46(30.5%), 가정 56(37.1%)

목차

1

저출산 정책의 성과와 과제

2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의 성과와 과제

3

아동정책의 성과와 과제

Part 1



저출산 정책의 성과와 과제

Part 1

아동수당

1. 2018년 9월 아동수당 도입: 소득수준 상위 10% 제외한 선별지원 방식
2. 아동수당법 개정
 - 2019년 4월 이후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소득수준 상관없이 보편지급
 - 2019년 9월 이후 만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연령 확대
3.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확대
 - 부모 설문조사: 24.9%의 지지로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 1순위로 선정
 - 전문가 의견조사: 34%의 지지로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 1순위로 선정

Part 1

아동수당

4. 아동수당에 대한 만족도

- 2019년 조사 43.9%에서 2020년 조사 61.1%로 증가
- 2020년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40만원 상당 아동돌봄쿠폰 추가지급

5. 아동수당에 대한 불만족 이유

- 부모 설문조사: ‘현금 지원수준이 낮아서’가 73%
- 영유아 부모 면담조사: 아동수당의 지급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효과에 의구심 제기
-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보편지급 및 지급연령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지급수준은 아동 당 월 10만원으로 변화 없음

Part 1

아동수당

6.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8.):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재정투자 GDP 비중

- OECD 평균 2.0% / 우리나라는 1.2%(아동수당 포함 시 1.36%)
- OECD 평균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GDP의 0.8% 추가 투입 필요
- 향후 10년간 매년 1.4조원씩 추가 재원 투입 필요
- 아동수당 지급범위의 점진적 확대 검토
-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위기 시 아동수당 금액 및 형태 등 추가 지급 방안 검토

7. 아동수당 예산: 2019년 2조1,627억원, 2020년 3조3,373억원(아동수당 지급 2조2,834억원, 아동양육한시지원 1조539억원)

8.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 뿐 아니라 지급금액도 재난 위기 상황 등 특수한 필요 가 있을 시 추가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

Part 1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

1. 부모 설문조사 결과의 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정평가 48.9% 긍정평가 18.1%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부정평가 45.9% 긍정평가 19.8%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부정평가 43.2% 긍정평가 25.7%

2.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 부모 설문조사에서 14.1%로 성과가 우수한 과제 중 2번째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성과가 미흡한 과제에서도 19.8%의 응답으로 2번째로 높게 나타남
- 부모 설문조사에서 14.3%의 응답으로 가장 집중해야 할 저출산 정책 중 2번째로 높게 나타남

Part 1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

3.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 제도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

- 부모 설문조사: ‘실제로 이용하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가 갖추어지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문가 의견조사: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인력 지원이 부족하여 실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

Part 1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

4.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방향 제시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예술인·특수고용직 종사자·자영업자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추진
 -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이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어도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
5.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의무화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됨

Part 1

의료비 지원 강화

1. 부모 설문조사
 - 저출산 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에서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는 긍정비율 40.6%로 저출산 정책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지원 확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 지원 등)'는 긍정비율 34.4%로 저출산 정책 중 3번째로 높게 나타남
2. 전문가 의견조사
 - 저출산 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에서 '의료비 지원 강화(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는 긍정비율 81.0%로 저출산 정책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지원 확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 다자녀 지원 등)'는 긍정비율 78.0%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Part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1. 부모 설문조사

- 저출산 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에서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는 부정비율 53.8%로 저출산 정책 중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저출산 정책 중 성과가 가장 미흡한 과제 1순위에서도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는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저출산 정책 중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 1순위에서는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는 1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부모들은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이 성과가 가장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로도 보고 있음

Part 1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2. 전문가 의견조사

-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1순위로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가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저출산 정책에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 1순위로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는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문가들은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이 성과가 미흡한 이유로 삶의 질에 대한 정의 및 내용 등의 구체성 부족,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

Part 2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의 성과와 과제

Part 2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1. 중앙정부의 보육 재정

- 총액: 2019년 5조4,954억원 / 2020년 5조6,726억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2019년 3조4,163억원 / 2020년 3조4,328억원
- 어린이집 지원: 2019년 1조1,868억원 / 2020년 1조4,241억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2019년 8,923억원 / 2020년 8,157억원

2. 유아교육 재정

- 총액: 2019년 4조3,928억원 / 2020년 4조5,596억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019년 3조8,153억원 / 2020년 4조316억원

Part 2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3. 누리과정 지원금(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2020년 유아학비 24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
- 2020년 유아학비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만원 인상(7년만의 인상)
- 2021년 유아학비 3만원 인상 계획(교육부 2021년 예산안)

4. 2019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년 연장: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

- 누리과정 지원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하였으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교육재정으로 하는 것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반발로 인해 2016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한시법의 상태이므로 재정적으로 불안한 상태

Part 2

보육지원체계 개편

1. 부모 설문조사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만족 29.0% 불만족 24.1%

구분	만족하는 이유	불만족하는 이유
부모 설문조사	연장보육 이용이 용이해지므로 45.5%	연장보육 이용이 어려워지므로 46.5%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므로 37.0%	비용 부담이 높아지므로 38.4%

2.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달성도 인식 평가에서 긍정비율 39.7% 부정비율 27.1%로 긍정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구분	보육지원체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16시 이후 연장보육을 담당할 교사 수급이 어렵지 않아야 함 36.4%
	지원인력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35.8%

Part 2

보육지원체계 개편

3.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면담조사

- 연장보육료 예산이 실제보다 적게 편성
- 예상보다 더 많은 연장반 교사 지원자로 인해 연장보육료 지원 예산이 부족해지는 문제 발생
- 연장보육시간은 오후 4시부터 시작하는데 연장보육료 지원은 오후 5시부터 가능
- 이 경우 오후 4시 이후의 하원지도를 기본보육 담임교사가 하게 되는 문제 발생
- 연장보육시간과 연장보육료 지원 시간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Part 2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1. 부모 설문조사

-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의 달성도 인식 평가에서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은 긍정비율 27.9%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은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 1순위에서도 1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2. 전문가 의견조사

- 달성도 인식 평가에서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은 긍정비율 64.0%로 두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음
-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은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 1순위에서도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Part 2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3. 유치원 및 교사 설문조사

- 유아교육 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에서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는 긍정비율 61%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4.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 보육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에서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는 긍정비율 64.9%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Part 2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5.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의

구분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놀이중심 누리과정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함 35.8%
	부모 인식 전환을 통해 현장 적용이 용이해야 함 30.2%
	놀이중심 누리과정 자료가 충분해야 함 18.1%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부모 인식 전환을 통해 현장 적용이 용이해야 함 33.8%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함 28.5%
	놀이중심 누리과정 교육자료가 충분해야 함 21.9%

Part 2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6.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면담조사

-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의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놀이중심 누리과정이 도입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코로나19로 인해 교사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개정된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Part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

1. 2019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취원율(정원기준): 16%,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어린이집 포함 시 26.4%
2019년 기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8.5%
2. 부모 설문조사
 -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는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 1순위에서는 13.7%로 2번째였으나,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1순위에서도 10.9%로 1번째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40% 목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확충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을 보여줌

Part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

2. 부모 설문조사

-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 1순위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질 강화’가 11.7%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양적인 확충 뿐 아니라 질 제고를 요구하고 있음

3.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면담조사

- 노후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시 시설의 열악함 지적
- 노후한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 시(매입형 유치원) 시설의 열악함 지적
-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시 시설기준 상향을 고려해야 함

Part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

3.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구분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사립유치원과의 상생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31.6%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증대 필요 21.9%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민간/가정어린이집과의 상생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56.3%
	저출산 추세로 인한 아동수 감소를 완화해야 함 15.9%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증대 필요 13.5%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해야 함 7.3%

Part 2

유보격차 완화

1.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는 부정비율 40.5%로 유아교육 정책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됨
2.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는 부정비율 56.3%로 보육정책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됨
3. 전문가 의견조사
 -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는 11%로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중 3번째로 높게 나타남

Part 2

유보격차 완화

4. 유보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것

구분	유보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것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29.3%
	교사 자격 및 처우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함 28.8%
	누리과정 등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충분히 인상되어야 함 14.9%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차이가 줄어야 함 11.6%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교사 자격 및 처우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함 29.1%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가 줄어야 함 23.2%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22.5%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면담조사	교사 자격·양성체계에서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Part 2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1. 부모 설문조사

- 유아교육 달성도 인식 평가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긍정비율 16.7%로 12.5%인 취학 전 출발선 평등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1순위에서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10.1%로 2번째로 미흡한 과제로 나타남

2. 전문가 의견조사

-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 1순위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18.0%로 가장 높음

3.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 유아교육 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부정비율이 34.9%로 3번째로 높게 나타남

Part 2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4.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

구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 필요 34.9%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개선 28.8%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18.1%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에게 유인책 제공 10.7%

5.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 2019년 3월부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현원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과 희망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도입
-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전면도입
- 에듀파인 전면도입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가능

Part 2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1.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 보육정책 달성도 인식 평가에서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는 긍정비율이 38.4% 부정비율 19.9%로 긍정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2.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를 위해 필요한 것

구분	어린이집 의무평가 등 현장에 적합한 질 관리체계를 위해 필요한 것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어린이집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함 45%
	평가 결과가 실제 보육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함 26.5%
	평가지표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함 11.3%

Part 2

온종일 돌봄체계

1. 2018년 4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발표

- 초등돌봄을 위해 학교돌봄 10만명, 마을돌봄 10만명 총 20만명의 돌봄 서비스를 2022년까지 증가한다는 계획
-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연계·협력을 통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 제시
- 학교돌봄 10만명 확충은 초등돌봄교실 7만명(3500실), 교실활용 지자체 운영 돌봄교실 3만명(1500실)으로 구성
- 마을돌봄 10만명 확충은 다함께돌봄센터 9만명, 지역아동센터 등 1만명으로 구성(다함께돌봄센터 1800개소 확충 계획)

Part 2

온종일 돌봄체계

2. 2019년 기준 초등돌봄 확충 수준

- 전체 초등돌봄 이용자 수는 약 39만7천명
- 초등돌봄교실: 290,358명(저녁돌봄 이용 아동수는 8,812명)
- 다함께돌봄센터: 정원 4,418명, 현원 2,968명
- 지역아동센터: 98,501명
- 초등돌봄교실은 2016년에 비해 약 5만명 증가
- 지역아동센터는 2016년에 비해 약 16,500명 증가

Part 2

온종일 돌봄체계

3. 부모 설문조사

- 초등돌봄교실의 만족도는 2020년 조사에서 60.3%로 2019년 조사의 70.9%보다 하락함
- 지역아동센터의 만족도는 2020년 조사에서 53.8%로 2019년 조사의 73.3%보다 하락함
- 초등돌봄교실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70.6%가 '서비스의 질/내용의 수준이 낮음'을 지적함
- 이러한 결과는 초등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제고에 주력해야 함을 보여줌

Part 2

초등돌봄 서비스의 근거 법령

1. 초등돌봄교실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방과후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 교육부고시 제2015-74호(초·중등교육과정 총론)
- 초등돌봄교실은 근거법령 미비

2.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8. 지역아동센터

3. 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Part 2

초등돌봄 서비스의 근거 법령

1. 초등돌봄교실의 근거 규정 법안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5월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했으나 교원들의 반발로 추진 중단
-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권철승 의원안(21대 국회): 계류 중
 - 강민정 의원안(21대 국회): 계류 중
 - 온종일 돌봄체계 특별법안은 온종일 돌봄의 주체를 지자체로 명시

2. 초등돌봄교실 근거법 마련의 어려움

- 교육과 돌봄의 분리(학교는 교육기관이므로 돌봄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인식)
- 초등돌봄교실을 학교의 책임으로 하는 것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반발
- 초등 1·2학년 공적 돌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Part 2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1. 온종일 돌봄체계 특별법안은 온종일 돌봄의 주체를 지자체로 명시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지자체 책무를 명시하는 근거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 제시
 - 초등돌봄전담사 노조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온종일 돌봄체계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 초등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되어 민간위탁될 경우 돌봄전담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임
 - 2020년 기준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세입과목 개편 후)가 45.2%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등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민간위탁 가능성 높음
 -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2019년 기준 총 173개의 다함께돌봄센터 중 직영 65개소, 위탁 104개소, 공동운영 4개소로 운영됨(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은 지자체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

Part 2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2.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 있음
 -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및 운영 등 지원 예산은 2019년 3,841억원, 2020년 3,814억원
3.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1년부터 지자체-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초등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 발표(2020.8)
 - 2021년부터 매년 750실씩, 2년간 총 1,500실, 아동 3만여명을 대상으로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로 추진
4. 온종일 돌봄체계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곧바로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보다 지자체 운영 초등돌봄교실의 확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Part 2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

1. 가정 내 돌봄을 위한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
 -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교육과정은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포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 의무화
2.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아동학대범죄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중 및 자격취소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포함
3.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의2)
4. 아이돌보미 자격요건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국가자격제도 도입 문제)

Part 3

아동정책의 성과와 과제

Part 3

아동정책의 재정

1. 보건복지부 사업 중 ‘아동자립지원(요보호아동 자립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예산은 2019년 13,076억원, 2020년 24,851억원으로 증가함
2.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2019년 225억원, 2020년 225.8억원으로 편성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에 비해 예산 지원 증가는 크지 않음
3. 아동학대 대응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기반하고 있는데, 재원의 안정성이 낮아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Part 2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1. 부모 설문조사
 - 아동정책 중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 1순위로는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이 26.1%로 가장 높았고,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이 24.5%로 그 다음으로 높았음
 - 아동정책에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 1순위로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2. 전문가 의견조사
 - 아동정책중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과제 1순위로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이 41%로 가장 높았고, ‘아동권리보장(보호, 참여, 건강, 놀이)’이 20.0%로 그 다음으로 높았음
 - 아동정책에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 1순위로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편)’은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Part 2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3. 이러한 결과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은 그동안 민간에 산재되어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아동 관련 중앙지원업무를 통합하여 아동보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
 - 아동권리보장원은 요보호아동지원,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아동돌봄,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아동실종 대응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
4. 중앙의 정책지원체계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었으나, 시·도 단위의 종합 조정 지원체계는 미비한 실정
 - 현 시·도 전달체계는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17개 시도), 아동자립 전담기관(9개 시도)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분절적 운영 및 지역 간 질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지역단위 통합 정책지원체계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일부 시도 대상 시범사업 추진 후 전체로 확산한다는 계획을 제시

Part 2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의무화

1.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는 것이 의무화되었음
2. 지자체의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특례 관련 고시에 따라 18개 시군구는 2020년 12월까지, 109개 시군구는 2021년 10월까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개편될 예정

| 주제발표 2 |

민선7기 경기도보육정책 중점추진방향 및
시사점

백 선 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민선7기 경기도보육정책 중점추진방향 및 시사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백선택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목차

1. 경기도 보육현황 및 특징
2. 제3차 경기도 보육발전 중장기 계획
3. 2019 경기도 보육정책목표 및 과제



경기도 보육환경

◆ 영유아 인구(만0~6세)의 지속적인 감소추세

- 경기도 영유아 인구 : 83.9만명('17년)→ 81.6만명('18년) → 77.7만명('19년) **7.1%감소**
- 전국 영유아 인구 : 304.5만명('17년)→290.5만명('18년)→ 272.7만명('19년) **10%감소**
- 특히 도내 만0세 영유아 인구의 감소율이 두드러짐. 3년간 1만명 감소(10.9%)

◆ 여성의 경제활동 및 신도시 중심 인구증가

- 최근 10년간 도내 전체 인구와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 1,178만명('10년)→1,324만명('19년)
반면 영유아 인구는 '14년 이후 감소세
- 경기도 여성경제참여인구 3년간 5.3%증가
286만명('17년)→291만명('18년)→300만명('19년)



경기도 보육환경

◆ 어린이집수와 어린이집 이용아동수의 완만한 감소세

- 어린이집 수 : 11,825개소('17년)→11,682개소('18년)→11,305개소('19년)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수 : 39.5만명('17년)→39.3만명('18년)→38.9만명('19년)

◆ 시군별 영유아 수 감소율에 큰 편차

- 화성시, 시흥시, 김포시 등 택지지구 개발 신도시의 영유아수 증가
- 반면 가평군, 연천군 등 농촌지역 영유아수의 급격한 감소세



경기도 보육현황

◆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낮은 반면, 높은 가정 어린이집 설치율('19년말기준)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37,371개소	11.6%	3.6%	1.9%	33.6%	45.8%	0.4%	3.1%
경기도	11,305개소	8.2%	0.6%	1.0%	32.2%	55.0%	0.6%	2.4%
서울	5,698개소	29.2%	0.5%	1.8%	26.5%	36.8%	0.6%	4.7%

◆ 특수보육 어린이집의 적은 공급('19년말기준)

(단위 : 개소)

	계	장애통합	방과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전국	37,371	1,100	229	8,015	153	312
경기도	11,305	367	8	1,874	41	49
서울	5,698	368	80	2,092	28	76



이전 도 보육증장기계획의 추진성과 및 한계

◆ 경기도 제 1차 증장기 보육발전계획(2006-2010)

- 도내 최초의 보육증장기 계획. 보육의 공공성을 주요 정책목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20% 목표 추진.
- 일하는 부모에 대한 정책(시간연장 보육 강화)을 중점 추진. 무상보육 시행 이전이므로 학부 모의 경제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 강조.
- 실제 도 특화사업으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맞벌이 가정 보육료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공립 이용률 목표 미달성



이전 도 보육증장기계획의 추진성과 및 한계

◆ 경기도 제2개년 보육발전계획(2011 ~ 2012)

- 2개년 계획의 비전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로, 양질의 보육환경과 아동·부모의 특성에 따른 맞춤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녀를 보육시설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개년 계획은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관심을 갖고 수요자 맞춤 보육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보육교사제도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을 본격 추진.
- 계획의 중심이 학부모의 요구도에 부응하는 것에 초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계획상 누락



이전 도 보육증장기계획의 추진성과 및 한계

◆ 경기도 제2차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13 ~ 2017)

- 보육서비스를 ‘영유아’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중앙정부 제2차 중장기 계획의 보육정신을 받아들여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에서 ‘아이가 즐거운 열린 보육 경기도’로 비전 변경.
-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다시 강조되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해 25개소씩 설치할 것을 목표로 추진. 재가 아동지원을 위한 아이러브맘카페가 가정보육교사제도와 함께 도 대표사업으로 성과를 거둠.
 - 대체교사에 대한 지원을 처음 반영하여 국비 지원사업 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강화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내실화를 위해 노력.
- 국공립 이용률이 크게 개선되지 못함.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다소 소극적인 목표치 설정이 한계.



제3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18-2022)

◆ 추진배경

- 경기도 제3차 보육발전 중장기계획의 비전은 ‘모든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경기도 보육’으로 설정함. 중앙정부 제3차 계획의 핵심 키워드인 ‘영유아의 행복’을 반영하면서 보다 도민들의 정책체감도가 높은 표현 사용.
- 지역, 경제적인 지위, 가족구조 등에 관계 없이 도내에 거주중인 영유아 가정에 양질의 보육 양육서비스를 형평성있게 속속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념을 담고 있음.
- 경기도 제3차 계획의 정책목표와 과제는 ① 제2차 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② 보육주체들의 정책요구도 ③ 중앙정부의 중장기계획의 방향을 토대로 수립됨.



제3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18-2022)

보육비전

모든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경기 보육

정책목표

보육공공성강화

1
인프라

신뢰도제고

2
서비스

역량강화,처우개선

3
교직원

추진과제

- 국공립이용률 제고 수급계획수립
- 저비용-고효율 국공립 설치모델 확산
- 공공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 취약보육 강화
- 경제선상장애위험아지원 강화

- 열린 어린이집 확대
- 경기도형 보육 컨설팅 확대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정착
- 어린이집 경영 합리화

- 보육교직원 일가정양립지원 (보육교사연가사용 촉진)
- 현장중심의 역량지원체계 구축 (국공립 원장사전직무교육 실시)
- 취약보육교사집중지원





민선7기 경기도지사 보육분야 공약사항 1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정책개요 :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 정책목표 : 매년 150개소이상, 22년까지 750개소 확충
- 추진현황 : 151개소(신축14, 공동주택 리모델링 135, 장기임차 2개소)
19년 162개소, 18년 145개소
- 고 려 점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도 특화사업 없음
시군간 높은 국공립 설치율 격차
(최소 여주시 2.9%, 최대 연천군 21.9%, 경기도 평균 8.2%)



민선7기 경기도지사 보육분야 공약사항 2

◆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의 질 제고

- 정책개요 :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보육서비스 향상을 통해 학부모의 선호도 증대 및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 정책목표 : 열린 어린이집 활성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제고,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 선정
- 고려점 : 경기도형 어린이집 사업 미운영
(선택과 집중 예산지원보다 보편적 복지방식 채택)
공약사항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 확산을 통하여 민간 가정 어린이집 운영 개선 토대 확보
('20년 7월 기준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이용율 84.5%)



민선7기 경기도지사 보육분야 공약사항 3

◆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1시군 1센터)

- 정책개요 : 경기지역 특성을 감안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 수요자 중심 설치
- 정책목표 : 2020년까지 지역특성 감안한 1시군 1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 추진현황 : 도센터 2개소, 시군센터 28개소(27개 시군, 수원시 2개 센터)운영중
미설치시군 중 안성, 양평은 2021년 설치 예정
동두천, 연천은 도 북부센터의 분소 형태 운영 예정
- 고 려 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주요 전달체계로 도 특화사업 수행.
☞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놀이지도사, 상담사 채용
수요자 중심 보육지원 확대



민선7기 경기도지사 보육분야 공약사항 4

◆ 아이사랑놀이터 확대

- 정책개요 :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와 놀이지도사 배치로 부모상담 및 놀이지도 통한 놀권리 확보와 가정양육지원 강화
- 정책목표 : 2021년까지 아이사랑놀이터 100개소 이상 확대
- 추진현황 : 30개 시군 95개소 설치 운영중 (미설치지역 : 동두천)
- 고 려 점 : 아이사랑놀이터는 가정양육지원중인 영유아만 이용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정한 요일과 시간대 어린이집의 예약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 그러나 일부 영유아를 위한 시설로 오해가 있어 예산확보시 어려움. 공공영역에서 영유아 대상 실내놀이터 운영시 갖추어야할 공익적 요소 합의 필요.



민선7기 보육분야 주요 성과

◆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안착

- 개요 : 민선6기 전임 도지사 시절 구축한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 관련 어린이집 연합회와 갈등을 조정하고, 시스템 사용을 안착시킴.
- 성과 : 어린이집 원장 대상 회계교육 대폭 확대, 시스템 활용 능력 강화. 89.4%를 차지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 건전성 토대 확보.
 - 전용 카드로 모든 운영비 결제, 거래내역 실시간 시스템 등록
 - '20년까지 연내 시스템 미도입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집 지원 축소예정



민선7기 보육분야 주요 성과

◆ 경기도 건강과일 지원사업

- 개요 : 불균형한 영양섭취를 개선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신선한 제철 과일을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제공
차별없이 공정하게 모든 어린이들이 다양한 과일 섭취 위해 가정양육중인 어린이에게 확대 공급
(경기지역화폐 활용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1인당 4만500원 지원)
- 성과 : 어린이집 등 기관이용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권 확보를 위한 혜택 제공



민선7기 보육분야 주요 성과

◆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안착

- 개요 : 민선6기 전임 도지사 시절 구축한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
관련 어린이집 연합회와 갈등을 조정하고, 시스템 사용을 안착시킴.
- 성과 : 어린이집 원장 대상 회계교육 대폭 확대, 시스템 활용 능력 강화.
89.4%를 차지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 건전성 토대 확보.
→ 전용 카드로 모든 운영비 결제, 거래내역 실시간 시스템 등록
→ '20년까지 연내 시스템 미도입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집 지원 축소예정



민선7기 보육정책 시사점

◆ 일부 우수 기관 중심 지원보다 수요자 체감형 정책 선호

-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과 같이 수요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수단 선호
(성남시의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사례 등)
- 기존 어린이집 재원 아동 대상 지원에서 가정양육까지 범위 확대
“공정” 도정 가치 실현
- 서울형 등 지자체에서 별도 선정한 우수 어린이집 위주 지원정책 미추진



민선7기 보육정책 시사점

◆ 영유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깊은 고민

-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 미이용 여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유아 가정이 지원받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존재
-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영유아 가정 대상 공정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
그러나 기존 양육수당과 중첩될 수 있는 소지,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통합적 활용이 어려운 점 등 때문에 논의단계에 있음.
- 건강과일 지원사업과 같이 영유아 가정에서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개별 아이터를 선정하여 지역화폐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변형된 기본소득방식 구현



민선7기 보육정책 시사점

◆ 보육행정 시스템의 투명성, 효율성제고 적극 추진

-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확대 건과 같이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단호하면서도 일관된 정책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 달성.
- 어린이집 대상 여러가지 복잡한 지원제도를 통합하는 내부적인 보육행정 효율성 제고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
- 제도적인 선진화 뿐만 아니라 보육분야에 내용적인 측면의 질적 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보육발전에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감사합니다

| 지정토론 |

이 재 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도 남 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지정토론 1

「문재인정부 3주년 육아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문

이 재 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문재인 정부 육아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

이재희(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문재인 정부 유아교육, 보육 국정과제

목표	관련 전략	내용
더불어 잘사는 경제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17.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목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목표) 결혼,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내용) 보육, 양육지원 강화(매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여 '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목표) 누리과정 지원예산 등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내용) '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유치원 취학을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교사,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 질 균등화)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목표)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 도모 (내용) 학생중심 교육과정 개편, 유아의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법제화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목표)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내용)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특수교사, 학교(급) 확대, 통합교육 지원 54.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목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수-학습활동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내용)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유치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7). 문재인 정부 국정우영 5개년 계획.

문재인 정부 유아교육, 보육 국정과제

성과

- ✓ 유아교육, 보육, 돌봄 국가 책임 강화
 -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 ✓ 아동수당 도입
- ✓ 초등 돌봄 사각지대 감소
 - 지자체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확산
- ✓ 출산 지원 강화
 - 근로시간 감소
 - 육아휴직 활성화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 인상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강화

성과와 과제

과제

- ✓ 사회서비스원 역할과 운영 방안
- ✓ 예산 및 재정
 - 아동수당의 충분성
 - 출산 수당의 지역간 편차 문제
 - 누리과정 예산(한시적 법적 근거)
- ✓ 보육지원체계 개편
 - 연장반 운영 문제
-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학교 담당 vs 지자체 담당 갈등
- ✓ 유아교육 및 보육 공공성 강화
 - 국공립 확충에 따른 사립기관과의 갈등

성과와 과제

과제

-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 유아교육의 위상 역할
- ✓ 문재인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비전은?
 - 의무교육에 대한 방향
 - 질 제고
 - 유아사교육비
- ✓ 유엔 아동권리 협약 준수
 - 아동예산확보, 지방자치 단체간 예산 격차
 - 스마트폰 과의존
 - 유기아동에 대한 보호
 - 아동시설 환경 개선
 - 아동권리보장(의견진술권 등)
 - 이주아동 사회보장

지정토론 2

「문재인정부 3주년 육아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문

도 남 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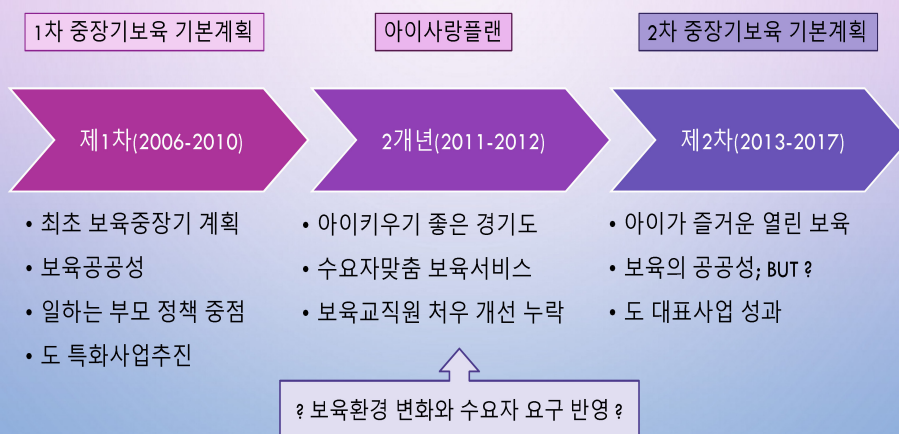
1.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 영유아보육법 11조 1항에 의함: 보육계획 수립
-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시군구
-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수급계획: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계획과 목표
- 변화하는 보육환경과 분석 및 정책 수요 파악
 - ⇒ 보육발전 방향 설정과 핵심정책과제 수립
 - ⇒ 광범위한 경기도의 지역 특성 파악, 중앙보육계획과의 균형 필요

2. 경기도의 보육환경

- 도내 전체 인구수와 세대수의 증가: 여성경제활동 증가
 - 영유아 인구는 '14년 이후 지속적 감소세
 - 영유아의 지속적인 감소/ 0세의 인구감소율(10.9%)
 - 어린이집 수와 이용 아동수의 완만한 감소세
 - BUT 개발신도시의 영유아 수 증가/농촌지역의 영유아 수 감소
 -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낮고 가정어린이집 설치비율 높음
- ⇒ 영유아 인구감소를 막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도울 수 있는 보육계획

3. 경기도 보육정책의 변화



4. 제3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18-2022)

공약사항

보육비전

모든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경기보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의 질 제고

육아종합지원
센터 확대

아이사랑
놀이터 확대



인프라: 보육공공성 강화

- 저비용 - 고효율 국공립 설치모델 확산, 취약보육 강화,
- 공공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경제선상 장애위험아

유형?



서비스: 신뢰도 제고

- 열린어린이집 확대,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확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정착, 어린이집 경영 합리화



교직원: 역량강화, 처우개선

- 현장중심의 역량지원체계 구축
- 보육교사 연가사용 촉진, 국공립 원장 사전직무교육 실시

대상?



학부모: 양육기반 확대

- 발달단계별 부모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실시, 양육컨텐츠 보급 및 전문인력배치 확대
-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보육양육비 부담 경감



영유아: 건강권

- 영유아용 공공실내놀이터 확대, 자연친화 놀이프로그램 개발 보급
- 영유아 숲 체험시설 조성,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시설기준 적용,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 강화

5. 보육분야 주요 성과

- 경기도 건강과일 지원사업
-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안착: 기존회계 시스템과 차별성?
- 수요자 체감형 정책 선호 > 우수기관 중심
- ⇒ 영유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고민
- 보육행정시스템의 투명성, 효율성 적극 추진

※ 제3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과 공약사업과의 연계성 모색 필요?

6. 미래지향적 정책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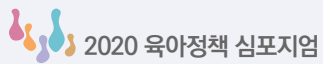
- 경기도의 주요 특성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보육환경을 반영
- 지역간 차이를 최소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보육 인프라 구축
- 거시적인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 중심의 정책 수행과 공약
- 서비스 유형과 대상에 따른 보육정책 수립
- 미래지향적인 창의적인 보육정책 구상
- 경기도의 보육정책과 중앙정부 보육정책에의 영향력



memo

memo

memo



2020 육아정책 심포지엄

“미래를 향한 포용적 육아정책 방향”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 문재인정부 3주년 육아정책 성과와 과제